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

호남은 역시 대단한 곳이다. 이른바 '실학'이라는 학문은 서울과 근기(近畿) 일대에서만 활발하게 논의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우리가 이미 밝혔던 대로 18세기 호남에서는 '3천재'(三天才)라고 불린 여암 신경준, 존재 윤패규, 이재 황윤석 등 탁월한 실학자들이 활동하여 서울과 근기 지역의 학자들에게 내리지 않을 업적을 남겼다. 평안도·함경도·황해도는 물론 충청·영남 지역 어느 곳에도 발군의 실학자가 배출되지 않은 것을 보면 역시 호남은 대단한 곳이었다.

여기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경준보다 20년 먼저 태어난 호남의 탁월한 실학자가 있었으니 바로 석당 나경적(1690~1762)이었다. 3천재의 명성이 너무 높아 선배 학자가 크게 알려지지 못했음은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운 일이다.

꿈꾸는 2040



이진술  
위안연구원 이사·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타도하자"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장외 투쟁에서 한 발언이다. 본래 정치인은 정당으로 투입된 시민들의 이야기를 의회와 내각에서 자유롭게 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많은 정치인들은 일부 시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을 의회 밖에서 자유롭게 표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당당하게 전달한다. 시민들은 모든 사회문제가 상대 정당과 그 정당의 정치인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시민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굽어 주기 위해 이야기를 생산하고 있다.

속칭 '사이다 발언'이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의 발언은 상대 정당과 정치인을 향한 극단적 발언이다. 거친 표현으로 전달되는 정보는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고 오류가 있는 정보가 난무한다. 설

기고



조기영  
농협 전남지역본부 양곡자재단장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던 시절이 있었다. 아주 오래되고 먼 예기인 것 같지만 쌀이 8200년 전부터 식량으로 쓰여 인류와 함께한 역사를 감안한다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소원했던 흰 쌀밥은 아주 가까운 시절의 얘기이다.

그렇다면 나는 흰 쌀밥을 얼마나 먹고 있을까? 1970년대 연간 1인당 136.4kg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은 2000년대에 들어와 서구화된 식생활 변화와 라면 등 대체 식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최근 60kg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쌀 산업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과거 주요 쌀 생산국이었던 필리핀, 국제미작연구소(IRRI)가 있고 3모작도 가능한 필리핀이 지금은 세계 최대 쌀 수입국이

석당(石塘) 나경적(羅景績)의 실학사상

70이 넘는 넉넉한 수를 누리면서 수많은 저술을 남겼으나, 거의 대부분 일실되어 전해지지 않은 탓으로, 석당의 업적은 묻히고 알려지지 않은 비운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묻힐 수도 잊힐 수도 없는 너무나 위대한 실학자였다.

뜻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오래전부터 언급은 되었지만, 유문이 발견되지 못하고 또 자료가 없어 연구자들이 나오지 않아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없었다. 다행히 최근에 '국역 석당실기'(안동고 예고 옮김)라는 참으로 희소 가치가 큰 책자가 나오면서 석당의 학문 일부가 세상에 알려지는 기회를 맞았다. 그러나 귀한 자료는 본래부터 있었다. 한 인간은 그 인간에 대하여 누가 어떤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 비치는 달라진다.

비록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공자가 그를 수제자로 여겨 인품과 학문을 가장 높게 평가했던 이유로, 안회(顔回)는 공자 문하의 최고 인물로 평가받았다. 석당을 평가한 한 편의 글은 크게 알려진 실학자 담헌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이 석당의 죽음에 바친 한 편의 제문(祭文)이다. 홍대용이 어떤 인물이고 그의 학문의 깊이와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한 글은 바로 담원의 친구 연암 박지원(朴

趾源, 1737~1805)이 지은 '홍덕보묘지명'(洪德保墓誌銘)이라는 글이다.

석당에 대한 기록에는 유집(遺集)이 있어 글이 전해진다고 했으나, 지금 전하는 글은 아주 희소하다. 안회가 유집을 전하지 못했으나 공자의 평가로 그를 알아볼 수 있듯이, 이제는 홍대용의 글 한 편으로 우리는 석당을 알아볼 수 있다. 홍대용은 30세도 더 위인 석당을 스승으로 모시며 실학을 배웠으며, 석당의 죽음에 당연히 조문하고 슬픔을 표해야 했다. 하지만 당시의 여러 가정 사정 때문에 직접 문상을 못하고 뒷날 지인을 통해 제문을 바치는 예의를 차렸다. 이윽후생(利厚亭生) 학파의 대표적 실학자 홍대용은 이윽후생의 실학에 뛰어난 석당의 인품과 학문에 대하여 사심 없이 훌륭한 평가를 내렸다.

"천문(天文)의 현상 모두 갖춰지니(大象象具)/ 하늘과 땅의 위치 발라지고(乾坤位立)/ 해와 달 도수를 따르니(日月循度)/ 그름과 초하루 시간에 맞고(晦朔隨時)/ 사계절 어긋나지 않았네(節氣無忒)/ 신기한 기계와 오묘한 열쇠는(神機妙器) 다 마음의 깨달음에서 나왔으니(悉出心得)/ 꼭 재주만 뛰어난서 그랬으랴(豈惟才美)/ 온 정신을 모두 쏟은 탓이리라(精神之極)" 이런 몇 구절의 글은 석당

의 자연과학에 대한 학문 수준을 넉넉히 알게 해 준다. 천문학에 밝아 하늘 땅의 위치, 일월의 도수, 초하루와 그름의 시간, 사계절의 사차까지 모두 통했고, 신기한 기계와 그 이용법을 모두 알았으니 창의적인 생각에 재주도 뛰어났지만,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알아내겠다는 지극한 정성을 모두 바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화에 들어가긴 늦었으나(登門雖晚)/ 오랜 지기처럼 마음이 통했네(托契如舊)/ 비밀을 담은 상자를 열어서(發篋祕傳)/ 아낌없이 모두를 나에게 넘겨주셨네(不吝付授)" 뒤늦게 제자가 되었으나 오랜 지기처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어서 자신이 실학자가 되었노라는 고백을 했다. 홍대용같은 대학자의 스승이 나경적이었다니 그가 어떤 사람인가는 그냥 알 아볼 수 있지 않은가.

다른 기록에, 석당은 당대의 실학들인 김창흡·조정만 등과 친교가 깊었고, 선 기옥형(璠璣玉璽)·자명종(自鳴鐘)·자음침(自音砵)·자전마(自轉轆)·자전수차(自轉水車) 등을 창조·제작한 과학자라고 칭찬했다. 이런 뛰어난 실학자를 오늘날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민족의 수치일 뿐이다. 석당은 화순의 동복에서 살았고 금성나씨의 후예였다.

거짓 정보로 병드는 사회, 시민이 나설 때

상가상으로 국민들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를 토론과 논쟁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 결국 사회에 온갖 거짓 정보가 확산되고 어떤 정보가 사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대니얼 지블렛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통해 '권한의 절제'와 '상대방 존중'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임을 역설한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생산한 거짓 정보가 '절제'와 '존중'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고발한다.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칭하는 미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절제'와 '존중'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정치가 양분되면서 시민 사회 또한 양분된다. 음악, 패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성을 표출하던 대한민국 사회는 정치적 이슈를 통해 두 가지 생각으로 양분화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양분화된 생각은 극단으로 치닫는다. 속칭 '조국 사태'를 통해 광화문 광장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개최되었던 촛불 시위가 이를 증명한다. 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우고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는 정치의 영역에서 다양성이 부재하다는 점은 꽤나 아이러니하다.

어떤 정보가 사실인지 알 수 없는 사회,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절제'와 '존중'이 무너져버린 사회, 다양성이 넘쳐난 사회가 정치영역에서는 양분화되어 버린 사회, 대한민국 사회는 정치인들의 거짓 정보로 인해 병들어 가고 있다.

우리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거짓 정보를 확산하려 하는 정치인을 정당이 주도적으로 '제압'해야 한다. 정당은 소속 정치인의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교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당의 기능 중 '거름망 기능'을 통해 거짓 정보를 생산하는 정치인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수많은 당직자와 보좌진 그리고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현명한 정치인들이 있다. 이들이 가짜 뉴스 확산에 반대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된다.

둘째, 언론은 '제3섹터'로서 입법, 행정, 사법 기관을 견제해야 한다. 중립 채널 JTBC의 '뉴스룸'은 인기 프로그램인 '팩트 체크'를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자들은 정치인들의 발언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퍼져나가는 거짓 정보를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증명해 왔다. 정치인들의 최우선 목표는 다음 선거에서 재선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언론의 사

실 관계 지적은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셋째, 정당과 언론을 통해 거짓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정치적 세련도가 높아져야 함을 전제로 한다.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정치인은 그 나라의 시민들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선출직 정치인들은 가장 정당하고 권위 있는 방법으로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정치인 중, 거짓 정보를 생산하는 정치인을 탄핵시킨 것 또한 대한민국 시민의 책임이다.

다행히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거짓 정보를 확산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정당 지도부는 인재 영입 및 주요 보직 인사에서 이러한 정치인을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KBS와 같은 공중파와 MBN 등 여러 종편 방송도 팩트 체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요즘은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도 팩트 체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자주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시민들의 차례이다.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을 보다 더 세련되게 발전시켜 거짓 정보가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정치적 가치관을 형성한다면, 이후 다가올 선거를 통해 현재보다 더욱 성숙한 대한민국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社說

'대통령 마케팅'은 그만, 정책으로 경쟁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후보 공천 적합도 조사에서 전·현직 대통령 이름과 청와대 근무 경력 사용을 제한하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정책과 공약보다 대통령의 높은 인기에만 의존해 왔던 상당수 예비 후보들의 경선 전략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옛것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비서관 경력의 경우 6개월을 넘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김대중·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의 이름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청와대' '노무현 청와대' '김대중 청와대' 등 특정 대통령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원천 봉쇄된다.

이번 결정은 관련 명칭과 경력 사용에 따른 여론 왜곡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이 몇몇 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경력에 포함시킬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10~20%포인트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광주·전남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넘어서자 예비 후보들이 앞다퉈 이를 프리미엄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실제로 이 지역 민주당 후보 56명 중 60%에 가까운 33명이 전·현직 대통령과 청와대 관련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너도나도 대통령 직함을 사용하다 보면 반발력이 떨어지고 지역의 역량 있는 후보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 주 진행될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에 앞서 명칭 사용 제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대통령 마케팅'은 대통령과의 인연만을 강조해 후보자의 능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이제 예비 후보들은 자신들의 실력과 역량,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공약 경쟁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서둘러야

장애인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과 편견 없이 당당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광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장애인들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는 최근 광주 지역 여든다섯 곳의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2층 이상 건물 여든세 곳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십네 곳이나 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 주차 구역이 없는 곳도 열다섯 곳이나 됐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으로 정한 주차장 넓이 3.3㎡ 이하로 미치지 못하는 곳도 열세 곳에 이르렀다.

휠체어 등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조차 없는 곳은 마흔두 곳이나 됐다. 경사로의

기울기 역시 법에 따라 정한 12분의 1(4.8도)을 넘어서는 곳이 서른 곳이었다. 행정복지센터 내 별도의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곳도 스물두 곳에 이른다. 더욱이 이 단체의 조사 결과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곳도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내에도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부족해 보인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자 비치율은 42%에 불과했다.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행정복지센터는 딱 두 곳뿐이었으며 수동휠체어를 갖춘 곳도 두 곳뿐이었다.

이는 '장애인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기본 의무 사항인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이며 정당한 편의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역설해 보여 준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편의 시설 설치에 배려가 아니라 의무 사항이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이 갖추지 못한 곳은 일급 곳이었으며, 경사로가 있더라도 안전바가 없어 이용할 수 없는 곳은 마흔두 곳이나 됐다. 경사로의

**無 等 鼓**

카프카의 소설 '변신'은 20세기 현대 사회의 특징을 예리하게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그레고리는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한 마리의 벌레로 변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외판원으로 근무하며 가족 생활비를 벌던 그는 졸지에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그레고리는, 어느 날 아버지가 던진 사과에 상처를 입고는 방에 갇혀 죽고 만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공존이 불가능한 두 가족의 문제를

지를 주장하는 등 중국인 혐오 현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보수 단체는 "관광 목적의 중국인 입국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6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4년간 웹상에서 많이 사용된 부정적 언어 개념 중 하나가 '혐오'다. '○○충' '극혐' '왕따' 등이 보여 주듯 우리 사회는 '혐오 사회'가 된 지 오래다. 독일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카롤린 예케는 '혐오 사회'라는 책에서

화려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해 이어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에 오를 만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봉 감독은 하나의 건물에 존재하는 빈곤과 부의 문제를 희극적이면서도 그로테스크하게 그렸다. 공간과 소품 및 냄새가 상징하는 계급과 계층은 '기생충'이라는 제목과 맞물려 영화적 상상력과 재미를 선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유럽과 북미는 물론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방인에 대한 혐오가 확대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중국인의 입국 금

혐오

다름'을 이유로 누군가를 멸시하거나 방관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공모된다고 주장한다. 혐오의 표적이 되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표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배제된다는 것이다.

카프카의 '변신'은 벌레로 변한 인간의 기이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영화 '기생충'에는 희망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루저'들의 고통도 드러워져 있다.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차별과 증오, 이에 대한 방관과 공모는 명백히 폭력이며 전염성 강한 바이러신다.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남본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